

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

공공 공사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확인 규정 신설

 추진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☎ 031-8008-5892



개선배경

-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2012 년도에 행정안전부 예규인 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’ 개정을 통하여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였음.
- 다만, 해당 규정은 ‘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한다’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 등 일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은바, 보호 받지 못하는 일부 근로자를 제도적 보호 장치 안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이 존재하였음.

[피해사례]

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보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만 적용되므로,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발생 시 발주청에서 해당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.

※ 관련규정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3장(공사계약 일반조건) 제9절(검사와 대가지급)

☞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통하여 간접노무비 지급 확인 명확화



개선내용

개선전

→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 한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발주청에서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

개선후

→ 직접노무비 대상 외에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확인 규정 신설

- 국민신문고 내 공무원제안 제도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일부 근로자를 제도적 보호 안으로 편입시킴.

추진과정

- '20.10.17. 중앙기관(행정안전부)에 공무원 제안 실시
 - 「계약 집행기준」 상 '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'의 지급 대상을 별도 규정하지 않거나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
- '20.11.16. 행정안전부 제안 채택 통보
 -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상반기 「계약 집행기준」 개정 예정 안내
- '21.05.20. 경기도에 공무원 제안 실시
 -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 개정 또는 입찰공고 시 명기를 통하여 선제적 실시 제안
- '21.06.04. 경기도 제안 불채택 통보
 - 현행법제도 취지와 목적에 위배 및 제도 확대 불필요 판단하여 불채택
- '21.06.14. 불채택 제안 재심사 요청
 - 현행 제도가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한바,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
- '21.07.06. 경기도 제안 불채택(비제안 처리) 통보
 -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진행 중임이 확인되어 비제안 처리
- '21.09.06.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(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, '21.09.13. 시행)
- '21.10.18. 행정안전부 제안 완전 실시 결과 통보
 - 간접노무비 지급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 가능토록 개정 및 시행 결과 통보



개선효과

- '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'에 대하여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제도 취지를 강화함으로써,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었던 간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를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.
-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사항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.